"의회와 적극 소통할 것"

전북도 자치경찰위, 법리해석 촉발 업무보고 논란에 "송구스럽게 생각"

"자치경찰제 안정 정착 최선… 언제든지 도의회 출석 의견 청취·답변"

법리해석으로 촉발된 의회 업무보고 논란과 관련,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의회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약속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조례의 합법성 여부나 법리해석의 문제를 떠나,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도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법리해석으로 빚어진 정회 논란과 관련해 "현행 자치경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 법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적 애로에 대해 도의회와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려 했으나, 본의와 달리 출석·답변 과정에 매끄럽게 소통되지 못하고 기관간 다툼으로 비치게 됐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전북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입장', 그리고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데 충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위치에 대해 언급하며, 자칫 '소통 부재'로 보여질 수 있는 법리해석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특히, "이제 막 출범한 자치경찰제도가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언제든지 도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감사원 권한 오·남용 방지'

민주 윤준병 의원, 감사원 개혁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권력기관으로서 감사원은 감사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 수집 행위 등을 할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금지 규정이 현행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해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실무를 담당했던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원의 감사로 인해 징계 또는 문책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거나 출석·답변의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감사 및 출석·답변 대상자에게 사전에 감사원의 취지와 이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사례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 감사시스템이 적극 행정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적정절차를 보장하며,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과정에서 감사 대상의 비위와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또한, 가치판단의 영역인 정부의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감사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를 하는 경우, 감사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으며,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적극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감사원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하기 전에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관련된 감사의 경우, 위법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지역 3040 청년 815명을 대표하는 젊은이들이 지난 15일 동학농민혁명 녹두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를 선언한 가운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정사회·공정국가 추구"

전주 3040세대 815명,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 선언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전주에서 815명의 청년들이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을 염원하며, 그 실현을 위해 공정사회, 공정국가 정책을 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3040세대 815명은 "직장인,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공정사회 실현과 양극화해소, 민주사회 대개혁의 길을 만들고자 함께 뜻을 모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식을 개최했다"라며 이재명 후보의 '대동세상'과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의 정신'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뜻을 같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행사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군 무명지도자가 안치된 전주 녹두관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김개남 장군이 처형된 초록바위로 이동해 결연한 의지를 담아 지지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이번 선언에서 '더불어 함께 잘 살자(대동세상 구현)'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시대가 흐른 2021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청년주거빈곤, 청년소득빈곤, 부동산문제, 불공정, 불평등으로부터의 해방, 청년들의 정치진출 장벽으로 부터의 해방을 염원하고,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청년기본대출 등을 적극 지지하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청년 석폐율제 등을 포함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적인 정책들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재명 후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3040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실력있는 후보로써 동학농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불공정과 양극화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815명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지향은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호남이기에 차별없이 지역균형발전에 앞장서고 대동세상을 만들어 갈것임을 확신한다"며 "호남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간 동학농민혁명처럼 전국의 모든 3040세대들이 함께 지지선언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예산심사기법 함양 의정활동 지원 최선

도의회, 예산분석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전북도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예산분석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13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을 함양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인 홍선기 서기관이 강사로 나섰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3시간 가량 진행됐다.

교육 주요내용은 ▲예산안 편성과 주요 재정제도, ▲예결산 심사과정, ▲예결산 심사기준 및 주요사례 등 전반적인 예산심사 방법과 그간 국회에서 예산심사시 지적됐던 주요사례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방의회 예산심사에 접목·도입 가능한 심사기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다.

이성호 입법정책담당관은 "이번 교육으로 상임위원회 예?결산 담당자들의 역량 향상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시 보다 더 심도있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우리 도의회는 소중한 예산이 전북도 주요 현안사업에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지,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더욱 더 철저하게 분석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국제창업특구·국제의료단지 만들 것"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새만금 활용 전북 발전방안 제시

"전주가 갖는 문화 역량 키워야" 전통문화 중요성도 특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새만금을 활용한 전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만금에 국제창업특구와 국제의료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새만금을 전북 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으로 삼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새만금에 국제창업특구를 조성해 국내의 창업인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 창업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규제를 덜 받으며 새롭게 창업하며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의 의료산업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의 연구자와 새만금을 모델로 하는 첨단의료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제창업특구 등이 이뤄지려면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며 "문제인 정부에서 동서도로와 남북도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해안 철도가 새만금에 가까운 곳을 지날 수 있도록 해야 도민이 원하는 항만이나 공항이 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철도를 비롯한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전통문화의 중요성도 특기했다.

"전북은 나름의 전통과 명맥을 간직하고 있다. 명인·명장이 많은 곳이 전북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는 시대에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전주가 갖고 있는 문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뉴시스

"노을대교 건립 성사로 지역민 한 풀어드릴 것"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최선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14일 고창군 해리면 동호항의 노을대교 추진 예정지를 찾아 "전북 서해안권 핵심 SOC인 노을대교를 꼭 성사시켜 지역민의 한을 풀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당대표 시절 유기상 고창군수의 방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전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현장을 찾아 고창군민의 염원을 챙겨듣고 힘을 더했다.

이 전대표는 이날 오후 유기상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심덕섭 민주당 전북도당 노을대교 건립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고창군민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유기상 군수로부터 노을대교 현장 설명을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창주민의 오랜 숙원인 노을대교를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전제했다.

이어 "바로 눈앞을 80분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즘 사람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도 77호선이 이 곳만 끊어져 있다. 서남해안도로가 불평등의 상징처럼 돼 있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기상 군수는 "노을대교는 30년 넘게 이어온 고창부안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이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돼 지역의 오랜숙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을대교는 고창군 해리면 동호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를 연결할 전체 7.48km길이의 다리를 말한다. 완공 땐 62.5km를 우회해야 했던 이동 거리가 단, 7km로 줄어든다. 기존 한나절 넘게 걸리던 거리를 단 10분이면 오갈 수 있게 된다.

특히 경기도 파주에서 부산을 잇는 국가기간도로망인 국도 77호선의 마직막 단절구간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전 대표는 "유 군수님의 방문과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 등 고창과 부안군민, 전북도민들이 노을대교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잘 알고 있다"며 "서해안시대 핵심 SOC인 노을대교가 꼭 국가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바꾸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 불균형 도로로 남게 된다"며 "노을대교도 중앙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코로나19 종식 후 내국인 관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서울과 제주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돼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관광객 분산 흡수 위해서라도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며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결정하는 심사가 이달안에 진행될 것으로 안다. 윤준병 의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꿈이 이뤄지길 빈다"며 "노을대교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토부 심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권역재활병원 전주 유치 환영"

최찬욱 도의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최찬욱 도의원이 "전북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환영한다"면서 "전북권역재활병원과 전북어린이재활센터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켜 도민들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북권역 재활병원'은 지역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집중재활 치료서비스, 장애인 건강검진, 방문재활 등 종합적인 공공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전북도의회가 보건복지부 등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의안(대표발의 최찬욱 의원)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재활병원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예수병원의 각별한 노력이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이미 선정된 예수병원의 전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상승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간 구성, 연계체계 구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북권역 재활병원은 15병상과 외래진료, 전문재활치료실을 갖추고, 460억원(국비 135억원, 지방비 135억원, 자부담 190억원)의 사업예산이 투입된다. /유호상 기자

섬진강 댐 하류 시군의장들 "수재민 수해 피해 전액 배상을"

임실군의회(의장 진남근)가 섬진강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지역 시·군의회 의장단(임실, 순창, 남원, 구례, 곡성, 하동)과 최근 구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섬진강 수해 1년, 피해배상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장단은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방류조절 실패로 인해 7개 시·군에서 8명이 사망하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되어 4,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수해 이후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해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 책임을 지고 수재민에 수해 피해 전액을 조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진남근 임실군의회 의장은 "앞으로 지역민들의 피해 전액이 조속히 배상될 수 있도록 시·군의회 의장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